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배포 시부터 보도가능	배포	2017.3.30(목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제도팀장 홍 성 기(02-2100-2840)		담 당 자	이 영 평 사무관 (02-2100-2842)	

제 목 : 「제재개혁」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 국회 통과

* 금융지주회사법, 은행법, 보험업법, 자본시장법, 금융사지배구조법, 상호저축은행법, 여신전문금융업법, 신용협동조합법, 신용정보법, 전자금융거래법, 대부업법

- ① 과태료 평균 2~3배, 과징금 평균 2~5배 인상
→ '숨방망이 금전제재' 문제가 개선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
-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는 동일한 금전제재를 부과
→ 법률마다 금전제재가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여 형평성 제고
- ③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등
→ 제재제도의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

1 추진경과

- 금융분야 「제재개혁」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'17.3.30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
- 정부위 심사 과정에서, '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제도' 확대 도입안은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삭제되었고, 그 외 정부위·법사위에서 법률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안 내용·자구를 일부 보완

참고1 : 국회 정부위·법사위 주요 수정사항

2 주요 내용

1.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

☞ 11개법 전부 해당

- (현 행) 금융법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,

* '17.3.30일 현재 43개 금융위 소관법 중 36개 법에서 규정(경영공시의무 위반,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)

-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·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

※ 공정거래법은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

- (개 정)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를 평균 2~3배 인상

- 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법 : 기관 1억원(현행 5천만원), 개인 2천만원(현행 1천만원, 보험업법은 2천만원)으로 인상

- 다만,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 과태료 수준(1천만원)을 유지

- 여전·저축은행·신용정보·전자금융·대부업·신협법 : 부담 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

- 여전·저축은행·신용정보·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천만원을 유지하되

·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, 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인상(현행 2천만원)하고

· 신협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폭 인상

- 지배구조법 : 주요 금융업권에 폭넓게 적용되므로, 법상 부과 한도는 인상(1~5천만원 → 2천만원~1억원)하되, 실제 부과시 자산 규모 차이를 고려

<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>

- (기존) A금융투자업자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

☞ (개정) 과태료를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

2.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

☞ 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저축은행·여전·대부업법

- (현 행) 금융법상 과징금은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징벌·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*되고 있으나,

* '17.3.30일 현재 10개 금융법(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저축은행·여전·신용정보·전자금융·대부업·회계사법)에서 규정(대주주 및 동일자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)

-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·제재 효과 부족

- (개 정) 법정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

- ① 「위반금액 × 부과비율」 인상 (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저축은행·여전·대부업법)

-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*

* 예: (은행)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의 10% → 30%,
(보험) 부당광고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% → 50%

- 대주주와의 거래한도(신용공여, 증권 취득)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%로 일괄 인상*

*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

금융지주(은행지주)·은행· 자본시장·저축은행·대부업법 ¹⁾	금융지주(비은행지주)· 보험·여전법	대부업법 ²⁾
(現)한도초과금액의 40% → (改)100%	(現)한도초과금액의 20% → (改)100%	(現)한도초과금액의 10% → (改)100%

1)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

2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

- ② 법정 부과한도액이 「일정금액」인 경우 (여전법)

-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금액 × 부과비율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~4배 인상

<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>

- (기준)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음

⇒ (개정) 부과비율 인상(10% → 30%)으로 인해 과징금은 25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(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규 개정시)

3.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

☞ 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저축은행·신탁법

- (현 행) 법률에 따라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·과징금·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 발생

- 또한,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도 상존

- (개 정)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(과태료·과징금·벌금)을 재조정*

* (벌금→과태료) 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, 신탁법의 검사 거부·방해·기피,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

* (벌금→과징금) 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의 부동산 취득 제한사항 위반

- 또한,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*하여 형평을 제고하고

* (은행법) 검사 거부·방해·기피, 경영공시의무·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

* (보험업법) 부수업무 신고,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·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

- 은행법상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해 은행이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*하던 문제점 개선

* 자본금 감소 신고의무, 재무제표 공고의무,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는 그 준수 의무자가 은행임에도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

4.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

☞ 저축은행·전자금융법

- (현 행) 금융법은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가 같더라도 위반행위별 중요도에 따라 시행령*에서 실제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

* 금융법은 시행령 별표의 “과태료 부과기준”에서 개별 위반행위별 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세분화하고 있음

- 그러나, 저축은행·전자금융법은 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시행령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

- (개 정) 해당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

5.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

☞ 금융지주·은행·신용정보·대부업법

- ☐ (현 행) 금융지주·은행·신용정보·대부업법은 과징금 채납분에 대한 가산금*의 상한 규정이 없어 채납자의 가산금 납부 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발생 가능

* 과징금 채납일부터 납부 전일까지 채납된 과징금에 연 6%를 적용(단위 부과)

- ☐ (개 정) 다른 법률의 사례*에 맞추어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

* 자본시장법, 저축은행법은 시행령에 6개월 상한 규정

6.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

☞ 보험·저축은행·여전·신용정보·전자금융·대부업법

- ☐ (현 행) 보험·저축은행·여전·신용정보·전자금융·대부업법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'요구'하는데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

※ 금융지주·은행법·자본시장법 등 여타 금융법은 금융위가 임원에 대하여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

- ☐ (개 정)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임원에 대한 '직무정지의 요구'를 '직무정지'로 변경

7.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

☞ 금융지주법

- ☐ (현 행)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*

* 은행법, 보험업법, 자본시장법 등은 제재처분 조항에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소속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으나, 금융지주법은 "금융지주회사등"만을 규정

- ☐ (개 정) 행정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속 임직원도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명기

➡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게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

8. 퇴직자 제재규정 정비

☞ (신설) 신용정보·전자금융법 / (일부 신설) 금융지주·저축은행법 / (보완) 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지배구조·저축은행·여전·대부업법

- ☐ (현 행) 퇴임·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*

* (예시) 은행법 §54의2④: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...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.

- 또한, 금융지주·저축은행법상 퇴직자 제재 중 일부*가 통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

* 금융지주법: 임직원에 대한 주의·경고·문책요구, 저축은행법: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

- ☐ (개 정)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·퇴직한 임직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*

* 은행법, 보험업법, 지배구조법, 여전법 → 금감원이 현직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

- 금융지주·저축은행법상 통보되는 퇴직자 제재수준을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로 확대

- 대부업법상 퇴직자 제재의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이 타 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퇴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록·유지하도록 함

- 아울러, 신용정보·전자금융법에도 퇴직자 제재를 도입하고, 신용정보법상 임직원 결격요건에 동 제재를 추가 반영

3 향후 계획

- ☐ 4월중 개정법 공포(예상),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

- ☐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* 추진

* (시행령)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완 / (감독규정) 과태료·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 개선 등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☞ 남겨놓겠습니다
☞ 빠르게 알려드립니다

구 분		정부안	수정사항
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제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업정지시 금융소비자 불편 등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주요업권 관련법에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 ☞ (신설) 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저축은행·대부업법 ☞ (보완) 자본시장·여전·전자금융법(공익성 요건 추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 삭제
자본 시장법	지급준비자산 보유 의무 위반 과태료	· 현행 벌금 3천만원에서 과태료 3천만원으로 전환	· 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 ⇒ 1억원으로 상향
	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	· 현행 한도초과분의 40%에서 100%로 부과 한도 상향	· 다른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⇒ 현행 유지 (한도초과분의 40%)
저축 은행법	지급준비자산 보유 의무 위반 과태료	· 현행 벌금 5백만원에서 과태료 1천만원으로 전환	·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2천만원으로 상향
	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	· 현행 유지 (한도초과분의 40%)	· 다른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⇒ 한도초과분의 100%
	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	· 현행 유지 (한도초과분의 10%)	· 다른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⇒ 한도초과분의 30%
여전법	자금조달방법 등 위반 과징금	·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부분의 금융법이 과징금의 한도를 정률로 정하고 있음 ⇒ 정액에서 정률(위반금액의 30%)로 변경

- 7 -

구 분		정부안	수정사항
신용 정보법	검사 거부·방해·기피 과태료	·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	· 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 ⇒ 5천만원으로 상향
	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	·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	· 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 ⇒ 5천만원으로 상향
	신용정보 등 유사 상호 사용 과태료	·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	· 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 ⇒ 5천만원으로 상향
	과징금의 가산금 상한	-	·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 징수기간의 상한(60개월)을 설정
	퇴직자 제재 규정 정비	· 퇴직자 제재 규정 신설	· 신용조회회사 등의 임직원 결격요건에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퇴직자가 포함되지 않음 ⇒ 퇴직자 제재를 결격요건에 포함
	임원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 강화 (직무정지 요구→직무정지)	-	· 현행 금융지주회사법, 은행법 등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
전자 금융법	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	·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	· 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 ⇒ 5천만원으로 상향
대부업법	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과징금	· 현행 유지 (한도초과분의 40%*, 10%**) *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의 경우 *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경우	· 다른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⇒ 한도초과분의 100%
	퇴직자 제재 규정 정비※	-	· 다른 금융법과 동일하게 퇴직자 제재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, 그 내용을 기록·유지하도록 함

※ 표시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사항. 나머지는 정무위원회 수정사항

- 8 -

참고2

11개 금융법 개정사항 총괄표

구 분	금융 지주	은행	보험	자본 시장	지배 구조	저축 은행	여전	신탁	신용 정보	전자 금융	대부 업법
과태료 부과한도 인상(신설)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						○				○	
과징금 부과한도 인상(신설)	○	○	○	○		○	○				○
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¹⁾	○	○							○		○
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(직무정지 요구 → 직무정지)			○			○	○		○	○	○
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	○ ²⁾										
퇴직자 제재 규정 신설									○ ³⁾	○	
퇴직자 제재 규정 보완 ⁴⁾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○

- 1) 보험업법은 은행법의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, 자본시장·저축은행법은 시행령에 60개월 상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, 여전·전자금융법은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한 규정이 불필요함
- 2)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해소
- 3) 신용정보법상 임직원 결격요건에 퇴직자 제재도 추가
- 4) 현직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(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지배구조·저축은행·여전법) / 통보되는 제재수준 확대(금융지주·저축은행법) / 기록·유지의무등 신설(대부업법) / 신탁법은 명확하므로 개정 불필요

- 9 -

참고3

주요 금융법 금전제재 개정사항

주요 위반사항	금융지주회사법	은행법	보험업법	자본시장법	저축은행법	여전법	신탁법	신용정보법	전자금융법	대부업법
1. 검사 거부· 방해·기피 ※ 과태료로 일원화	현 행 과태료 (1천만원)	과태료* (1천만원) * 부과대상: 임직원	과태료* (5천만원) * 부과대상: 보험사 * 발기인 등: 2천만원	과태료* (5천만원) * 부과대상: 위반한자	과태료* (5천만원) * 부과대상: 위반한자	과태료* (5천만원) * 검사에 필요한 정보, 기록문서, 출석· 의견진술 거부 등	벌금* (2천만원) * 부과대상: 조합, 중앙회 임직원, 청산인	과태료 (1천만원)	과태료 (1천만원)	과태료 (2천만원)
	개 정 과태료 (1억원)	과태료* (1억원) * 부과대상: 은행 * 임직원 등: 2천만원	과태료* (1억원) * 발기인 등: 현행 유지	과태료 (1억원)	현행 유지		과태료 (2천만원)	과태료 (5천만원)	과태료 (5천만원)	
2.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※ 과태료 한도 상향	현 행 과태료 (1천만원)	과태료* (1천만원) * 부과대상: 임직원	과태료* (5천만원) * 부과대상: 보험사 * 발기인 등: 2천만원	과태료 (5천만원)	과태료 (3천만원)	과태료 (1천만원)	과태료 (1천만원)	과태료 (1천만원)	과태료 (1천만원)	과태료 (2천만원)
	개 정 과태료 (1억원)	과태료* (1억원) * 부과대상: 은행 / 보험사 * 보험사 발기인 등: 현행 유지		과태료 (1억원)	과태료 (5천만원)		과태료 (2천만원)	과태료 (5천만원)		과태료 (5천만원)
3. 경영공시 의무 위반 ※ 과태료로 일원화	현 행 과태료 (1천만원)	위반시 금전제재 없음	과태료* (5천만원) * 발기인등: 2천만원	과태료 (5천만원)	과태료 (5천만원)	과태료 (5천만원)	벌금 (1천만원)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
	개 정 과태료 (1억원)	과태료 (1억원)	과태료* (1억원) * 발기인등: 현행 유지	과태료 (1억원)	현행 유지		과태료 (2천만원)	-		

주요 위반사항		금융지주회사법	은행법	보험업법	자본시장법	저축은행법	여전법	신탁법	신용정보법	전자금융법	대부업법
4.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※ 과태료 한도 상황	현 행	관련의무 없음	과태료 (5천만원)	위반시 금전제재 없음	과태료 (5천만원)	과태료* (1천만원) * 중앙회대상 (승인사항)	위반시 금전제재 없음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
	개 정	-	과태료 (1억원)		과태료 (5천만원)		-				
5. 대주주와의 거래 (신용공여· 주식취득 등)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※ 과태료 한도 상황	현 행	과태료 (5천만원)	과태료 (5천만원)	위반시 금전제재 없음	과태료 (5천만원)	과태료 (5천만원)	과태료 (5천만원)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	과태료 (5백만원)
	개 정	과태료 (1억원)				현행 유지		-			과태료 (5천만원)
6. 지급준비 자산 보유의무 위반 ※ 과태료로 일원화	현 행	관련의무 없음	과태료 (5천만원)	벌금* (1천만원) * 책임준비금	벌금* (3천만원) * 종금사 대상	벌금 (5백만원)	관련의무 없음	벌금 (2천만원) * 상환준비금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
	개 정	-	과태료 (1억원)		과태료 (1억원)	과태료 (2천만원)	-	과태료 (2천만원)	-		
7. 대주주 신용공여* 한도(또는 신용공여 금지) 위반 * 주식취득, 자산매매등 포함 ※ 과징금 한도 상황	현 행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40%(은행지주), 20%(비은행지주))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40%)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20%)	과징금 (한도초과액의 40%)	과징금 (한도초과액의 40%)	과징금 (한도초과액의 20%)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10%(대주주 신용공여), 40%(여신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))
	개 정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100%)			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100%)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100%)	-		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100%)

- 11 -

주요 위반사항		금융지주회사법	은행법	보험업법	자본시장법	저축은행법	여전법	신탁법	신용정보법	전자금융법	대부업법
8. 동일차주 신용공여* 한도 위반 * 다른회사의 주식취득 제한 포함(지주법) ※ 과징금 한도 상황	현 행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10%)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10%)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10%)	과징금* (한도초과분의 40%) * 종금사 적용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10%)	관련의무 없음	벌금 (2천만원)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
	개 정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30%)				과징금 (한도초과분의 30%)	-	현행 유지	-		
9.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위반 ※ 과징금으로 일원화	현 행	관련의무 없음	과징금 (초과소유 부동산 취득가액의 10%)	위반시 금전제재 없음* * 비업무용부동산 취득	벌금* (3천만원) * 종금사 대상	벌금* (1천만원) * 담보권 실행 이후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	과징금 (1억원)	위반시 금전제재 없음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	관련의무 없음
	개 정	-	과징금 (초과소유 부동산 취득가액의 30%)					-			

：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수정사항